



현장

정치부 기자의 현실과 기사 쓰는 마음

“한국 기자들은 출입처에 얹매여 있다.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의 발표, 발언을 전하는 데 치중한다. 취재는 발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처 밖으로 나가 시민, 이익 집단, 연구기관 등을 만나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입처를 역으로 죄어가야 한다. 그러니 출입처에서 기자 한 명씩이라도 밖으로 내보내 보자. 출입처를 한 명이 맡고 있다면 하루 이틀이라도 밖으로 나가 보자. 출입처의 발표, 유력 인사 발언의 진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곧 진실 찾기다.”

박재영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글의 취지를 위와 같이 요약해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 다섯 명에게 회람했습니다. 더불어 ‘정치부 취재 활동이 어떤지, 정책 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공감하는지, 어떤 정치 기사가 많아지면 좋을지’ 등을 물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의 이야기는 국회를 만 2년 넘게 취재 중인 제 경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장 기자의 이야기를 정리해 전합니다. 가감 없는 생각을 듣고자 익명 인용을 전제로 대화했습니다.

● 고민 담긴 발언 기사 이상과 현실 간극 큰 정책 기사

정치인의 발표와 발언을 전하는 기사가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부분 기사를 그저 ‘받아쓰기’ 방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기자는 발표와 발언의 의도, 맥락, 배경, 파장, 전망 등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해설, 분석, 종합 기사 형태로 발전시키려 노력합니다. 정치부에 오기 전 “정치부 기자는 벌어지는 일만 보도하는 것 같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방송사 A 기자는 “(와서 보니) 기사 하나하나에 고민이 담겼더라. 비판적 시각을 담아 쓰고, 기사에 못 담은 것은 출연이나 취재 후기 등에 담아내려 노력하더라”고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는 권력을 견제하는 게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종합지 B 기자는 “발언에 담긴 내막이나 속내를 들여다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며 “발언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한다. 배치 순서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치인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합니다. 한국 정치는 소위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중심 인물이 여야 역학 관계와 정세를 고려해 결단하는 식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취재하고자 국회 출입을 지망한 경제지 D 기자는 “막상 인물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발언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게 많더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정해서 딱딱 말하면 끝나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통신사 E 기자도 “집권 여당 등 정치권의 ‘그립(장악력)’이 세고 당 대표 등 주요 인물의 한마디 한마디가 결정 자체니 기자는 온갖 혼란을 그들에게 질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무 기사가 범람하는 만큼 정책 기사는 적어집니다. 정책 기사가 시민에게 유용하다는, 그래서 더 많아져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기자는 없을 것입니다. B 기자는 “민생하고 연결되는 것은 정책 기사”라며 “정치인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인이 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기사가 적은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지 C 기자도 “정책 기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이 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책을 취재하려 해도 정책에 관심도 전문성도 적은 의원과 대화하며 의욕이 끊인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D 기자는 정책을 다루는 시리즈 기획 기사를 쓴 경험을 떠올리며 “국회에서는 이런 기사 자체를 생소해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 거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많이 봤는데 자기 지역구 예산을 당겨오려고만 하지 국가 경제 방향 등을 고민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A 기자는 “(대놓고) ‘나는 법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다”며 “(본인 법안에 대해) 전화해서 물어봐도 틀린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 출입처 제도 속 현실적인 개선 방안

정치인의 발표와 발언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처 바깥의 시민, 이익 집단, 연구기관의 이야기를 듣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출입처 제도 속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이상 각자가 맡은 출입처 취재로도 바쁘고, 각 출입처가 비출입 기자에게 비우호적인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원실에 요구하면 일주일 만에 나올 자료가 다른 부서 기자가 요청하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D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은 부서 간 협업 강화, 기획팀 운영 등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올렸습니다. B 기자는 “현재의 부서 협업을 좀 더 발전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시간적인 여유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A 기자는 “정치부 경험을 오래 한 기자가 기획팀에 가서 한 번씩 취재 활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팩트체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사가 운영하는 팩트체크팀은 통상 며칠 지난 이슈에 대해 기사를 발간하는데, 현장 기자가 당일에 강도 높은 팩트체크를 해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도달할 것이란 이유입니다. E 기자는 “문제는 발언 기사의 경우 팩트체크 기사가 나오기 전에 다 소비된다는 것”이라며 “이후에 나오는 팩트체크 기사는 유권자에게 잘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전 민심 탐방 기사를 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는 방안에는 “좋은 생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故) 데이비드 브로더(David Broder)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기자들은 선거구를 걸어 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거실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유권

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몸소 실천해온 사례를 언급하자 나온 반응입니다. 지역 여행을 가면 택시 기사 등과 꼭 정치 이야기를 나눈다는 A 기자는 “그런 걸 항상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번씩이라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B 기자도 “최소한 시민의 목소리 정도는 직접 듣고 쓰면 좋을 것 같다”며 “시민들의 필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정책 대상자 ‘타깃팅(targeting)’도 명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출입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C 기자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를 떠나 시민과 많이 접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막연하게만 들린다”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지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 포털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기자들과 대화 중 자연스럽게 나온 주제, 그러나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털’입니다. 뉴스 소비시장을 왜곡시킨 포털은 출입처 제도만큼 기자 운신의 폭을 좁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 기자는 “인터뷰하기 직전에 포털 뉴스 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의 다 발언 기사로 깔려 있더라”며 “심층 보도 기사가 적긴 하나 없는 건 아닌데 포털로 인해 과편적인 기사들이 주로 눈에 띠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포털이 자극적인 발언 기사 위주로 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니 ‘클릭 수’를 신경 쓰는 언론사는 발언 기사를 놓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상황입니다. C 기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는 시대에,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용이한 정치 뒷이야기 등 ‘흥미성’ 기사를 포기하기도 힘든 상

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처음 나누면서 지금 까지 몰랐던 동료들의 노력과 열의를 알게된 것은 제겐 예기치 않은 소득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더 좋은 기사를 쓰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고, 그에 감화돼 저 역시 더 분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기자는 최근 자발적으로 쟁점 법안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를 썼고, 또 다른 기자는 기획취재지원 사업에 선정돼 해외 출장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정책 기사를 더 많이 쓰고자 법안을 톱아보려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청년 당원들을 접촉하고 토론회 당사자들을 만나는 등 영역을 넓혀야 한다” 등의 다짐도 남겼습니다.

대화를 끝내면서 “학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 기자는 “좋은 기사를 참 쓰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있다. 좋은 기사에 호응하고 소비하는 시민들, 이를 칭찬하는 학자들이 없으면 현실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C 기자는 “양질의 기사를 찾아 읽는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며 “발언 기사보다 분석 기사, 정쟁 기사보다 정책 기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정치 기사의 초점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되짚기’는 《신문과방송》이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저널리즘클럽Q와 공동 기획하는 코너입니다.

참고문헌

임민혁, <풀리처상 받았던 미국 최고의 정치 칼럼니스트 브로더 별세>, 조선일보, 2011.3.1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10/2011031002101.html